

경상남도 지역정책금융 도입과 운용방안

Inside&Insight

+ 지역정책금융의 의의

- 경남지역정책금융이란 집중 지원과 투자를 필요로 하는 부문에 지원하는 지역금융을 말함
- 지원금의 상환을 전제로 하는 융자(loan)와 출자(equity), 그리고 보증(guarantee)의 세 가지 형태가 있음. 예를 들면, 융자 후 낮은 금리(저리)로 재지원(재할인)하거나 이차보전과 같이 이자를 보전해 주는 제도를 주로 말함

+ 경남의 지역금융지원 대상 분석

- 지역금융 수요처는 1차산업(농림축수산업), 서민·재래시장중소사자·소상공인, 3차서비스업(도소매 등 유통업과 생산자서비스업), 도시계획·건축업과 산단스마트화 그리고 제조업으로 나뉨
- 이 중 도시계획·건축업은 농어촌 스마트화(농산어촌개발사업, 농식품부 시행)와, 도시재생(구도심의 도시재생과 신도시 스마트화, 국토부 시행) 및 산단스마트화(오래된 산업단지의 리모델링과 신규 산단 스마트화, 국토부 시행 중) 등으로 구분 가능
- 주수요처로 서민·재래시장중소사자·소상공인 지원, 창업벤처기업 육성, 그리고 제조업 첨단화 등 세 업종임. 이들 분야별로 지역정책금융을 조성하고 차별화된 운용전략이 바람직함

+ 지역정책금융 수혜대상자 구분, 조성하고 운용 필요

- 첫째(서민, 서민, 소상공인, 귀농귀촌이나 푸드트럭과 같은 업종은 현재 운용하는 신용보증기금, 햇살론, 보금자리론 등의 규모를 대폭 늘리고, 홍보와 금융접근성을 제고하는 등 운용전략 제고
- 둘째(기업, 신산업), 수주에 의한 선박건조 RG발급과 금융지원, 또는 신산업 육성과 같은 경우처럼 정책 금융의 수요규모와 액수가 상당히 큰 경우. 4차산업혁명 연계 smart factory 전환 조성을 위한 거대 자금 수요 시
- 셋째(벤처스타터, 신기술), 벤처스타터나 신기술금융의 경우 운용자금의 크기가 어느 정도 커야 하지만 상대적으로 운용에 대한 리스크도 동시에 큰 경우
- 이상의 세 영역을 고려한 지역정책금융을 구분, 조성·운용할 필요가 있고, 운용주체와 방식도 세 가지 각각에 대해 차등화 할 필요가 있음

① 지역정책금융 의의

☞ 의의

- 경남지역정책금융이란 도내 경제민생정책을 수행함에 있어서 집중 지원과 투자를 필요로 하는 부문에 지원하는 지역금융을 말함
- 융자해 준 이후 낮은 금리(저리)로 재지원(재할인)하거나 이차보전과 같은 이자를 보전해 주는 제도를 주로 말함
- 정책금융은 지원금의 상환을 전제로 하는 융자(loan)와 출자(equity), 그리고 보증(guarantee)의 세 가지가 있음

☞ 지역정책금융의 적용대상별 필요성

- 지역정책금융의 수혜대상으로 영세서민, 기업, 벤처스타터(vnture starter), 새로운 도전과 출발, 신기술, 신산업 등으로 대별
 - 이들 대상별로 지역정책금융의 구성과 적용, 운용과 방법이 다르게 고안될 필요가 있음
 - 특히, 4차산업혁명의 도래로 도내 기계산업 연관 기업체들의 스마트공장화, 첨단기술 개발, 이전, 사업화 및 융복합화에 막대한 자금수요가 있기 때문에 이러한 점을 감안한 새로운 정책금융 구성과 도입이 필요한 실정임
- (서민)지역의 서민과 소상공인, 영세자영업자에게 금융접근성 강화 필요¹⁾
- (기업)RG발급 같은 선박금융, 담보부족 등으로 자금순환의 어려움에 따른 흑자도산 가능업종과 기업체가 필요로 하는 지역정책금융
- (벤처스타트, 기술)또한, 벤처자금 확보가 힘든 창업가 및 기술력이 뛰어난 창업보육기업이나 기술기업, 창업 초기 벤처기업에 대한 기술(보증)금융도 정책금융의 중요한 역할임
- (도전과 출발)귀농어촌 귀농어업 계층, 장년층과 베이비붐세대의 새로운 도전영역의 금융수요, 그리고 청년층이 도전하는 1인기업이나 푸드트럭과 같은 새로운 도전에 필요로 하는 한계금융
- (신산업)1,2,3차 산업은 물론 4차산업혁명 기술개발과 신업종에 필요로 하는 광의의 신산업금융 등의 분야와 금융수요가 날로 확대될 전망

☞ 장단점

- 장점으로는 금융접근성이 힘든 부문과 업종 및 분야에 지역정책금융을 통해 조기에 발전의 기회, 성장, 육성의 계기를 가져올 수 있고, 또한 해당 업종이 당면한 불리한 시장상황을 단번에 전환시킬 수 있음
- 단점으로는 금융산업의 작은 왜곡을 동반하고, 해당업체의 자생력 약화 가능성이 있으며 혹은 공정거래의 저해 요인이 되어 가끔 무역마찰의 소지도 제공할 수 있음

② 지역정책금융의 사례

☞ 고도 경제성장기 우리나라 정책금융

- 특정 업종과 수출업 지원을 위해 도입하거나 자금상황이 매우 힘든 농어촌분야에 보조

1) OECD의 서민이란 재산이 없고 소득 취약, 신용등급 낮은 중위소득 50% 이하를 보통 칭하나, 국내에선 세대당 연소득 3천만원 이하나 신용등급 6,7등급 이하를 칭함. 여기서는 이를 혼용하되, 금융접근성이 힘든 도민들의 생계유지를 위해 통상적으로 칭함.

- 경제개발계획기에 수출 지원, 기간산업 건설, 중소기업 육성, 농어업농어촌 개발, 특수산업 보호 육성 등의 목적으로 도입

▣ 정책금융의 위축

- 자금운용 효율성과 자율성 저해, 국내 금융산업 경쟁력 저하 동반
- 1980년대 초 금융자율화 추진 이후 정책금융 비중 축소
- 1990년대 금리자유화 계기로 상업은행과 국책은행이 취급하던 정책금융을 국책은행이 전담하게 함
- 정책금융 공급수단인 한국은행의 재할인제도를 자동재할인제도에서 총액한도제도로 전환하는 방식으로 정책 금융 영역과 기능 축소

▣ 지방화 이후 신보

- 지방화 이후 지역의 소상공인, 영세자영업자, 전통시장 종사자 등 금융접근성이 매우 열악한 대상으로 각 지자체 별로 신용보증기금 확보 및 운용 중
- 경남은 1996년에 조합 형태로 설립되어 운용되었음
 - 2000년에 재단설립과 운용법안이 마련되어 이전의 조합은 해산과 함께 새로운 재단이 구성됨
 - 현재 창원에 본부를 두고, 진주, 김해, 진해 등 주요 도시별로 지점을 통해 영세도민들의 편의제고를 위해 운용 중임
- 그렇지만, 운용총액이 적고 영세민들의 활용을 위한 접근성은 여전히 힘들며 또한 대도시권 위주의 운용으로 지역적 한계를 가짐

▣ 서민금융의 태동

- 지역정책금융 중 대표적 서민금융²⁾은 지역별 신보에 더하여 햇살론, 보금자리론, 미소금융, 바퀴드림론 등이 있음
- 2000년대 이후 2004년에 모기지론이 만들어지고 이를 기초로 2005년부터 저소득층과 무주택자들을 위해 보금자리론을 만들어 운용함
 - 대기업의 서민금융 지원을 위해 2009년 말경에 삼성이 수원에서 처음 판매한 삼성미소금융재단 1호점을 개설, 운용하기 시작함
 - 햇살론은 2010년에 금융위원회에서 판매하기 시작함
- 현재 서민금융통합지원센터가 영남권에 총 11개가 있고, 경남에는 창원, 진주, 거제 등 세 곳에 있음 (<http://www.cfc.co.kr>)
 - 센터는 서민금융진흥원, 신용회복위원회, 국민행복기금, 지자체, 민간 금융회사가 참여
 - 주부대출, 소액대출, 직장인대출, 햇살론, 대환대출 등의 상품으로 서민금융을 지원하나 한계에 있음
- 정부는 서민 목돈 마련을 위해 재형저축(2013년 출시), 소득공제장기펀드(2014년 출시), 개인종합자산관리 계좌(ISA, 2016년 출시) 등 정책금융 제공
 - 이들 또한 가입기간 길고, 서민자산 형성보다는 금융기관의 마케팅 도구화 전략, 그리고 가입상품들이 타 상품에 비해 수익률 제고보다는 세제 혜택과 이자소득 비과세에 주안을 둬으로써 서민들의 매력을 사지 못함

2) 서민금융이란 담보가 힘들므로 신용대출, 소액대출, 그리고 담보가 없기 때문에 고금리대출 가능성이 크다는 원론적인 특징이 있지만, 생계유지나 자활을 가능하도록 돕는 금융으로 정의함이 바람직함.

▣ 서민금융의 역할, 장단점과 한계

- 서민금융은 보급자리론, 햇살론처럼 2010년 이후 활발하게 운용³⁾
- 금융접근성이 매우 열악한 도내 서민 지원과 서민재산 증식을 위한 취지는 좋음
- 대부분의 서민금융은 정부, 금융사 및 대기업에서 설계, 운용으로 여전히 서민은 종잣돈 마련에 힘들고 어려움
- 대출형은 마중물이어야 할 자금 접근성이 여전히 어렵고 금액 또한 규모가 소액임
- 저축형은 대부분 상품기간이 길고 이자소득 비과세에 불과하여 비인기로 전락
- 한계로는 론(융자)이나 대출의 경우 소액이고 접근이 여전히 어렵고, 저축은 수익률이 거의 차이가 나지 않는 정도로 높지 못함
- 경남도내의 서민들의 금융접근성도 이러한 전국적 상황과 거의 같은 수준임
- 서민금융도 은행이나 운용기관에서의 엄격한 심사, 선별과 같이 담보력이나 재무등급에 의존하는 경우 또는 그러한 성격이 짙으면 서민들의 금융수혜기회는 더욱 낮아질 것임

▣ 기술금융의 도입과 한계

- 창업벤처기업이 주로 필요로 하는 금융을 말하며, 기성기업에서도 신기술개발, 이전, 사업화에 필요로 하는 경우 기술금융에 포함됨
- 중기청의 모태펀드, 중소기업진흥공단과 기술보증기금 등이 있음
- 이들의 한계 역시 직접금융 대신에 간접금융(온렌딩 on-lending)에 의해 금융접근성이 더 떨어짐
- 온렌딩은 독일식으로 민간은행이 상업적 관점에서 정책자금 업체나 대상을 심사, 선별하여 모럴헤저드는 피하겠지만 접근성은 매우 떨어짐
- 특히, 창업기업은 연구개발에 필요로 하는 금융(R&D금융), 죽음의 계곡(death valley)으로 불리는 사업화 단계(벤처스타트업금융)에 반드시 필요로 하는 자금접근성은 매우 떨어짐. 이후 상업화단계는 소위 다윈의 바다(Darwin's Sea)로 마케팅, 홍보, 대량생산 등으로 많은 자금(대량생산금융)이 소요되는 시점임
 - 다윈의 바다의 경우 2원적임. 즉, 해당 벤처스타터가 죽음의 계곡에서 벗어나면서 경쟁력을 보이는 경우 엄청난 펀딩이 예약될 정도로 자금 확보력이 커짐. 반면에 죽음의 계곡 기간 동안 그러한 성장가능성을 보여주지 못한다면 다윈의 바다에서도 여전히 자금 총당의 어려움에 봉착하게 됨
- 경남제조업의 미래개척에 필요한 4차산업혁명 관련 첨단신기술은 기존 기업군이나 혹은 도내에서 개발, 창업, 이전, 사업화, 융복합화 등에서 힘든 여건이기 때문에 이와 연관된 금융 접근과 확보도 창업기업군의 단계별 자금난 이상으로 힘든 상황임
 - 따라서, 도내 기성 제조업과 신규 창업기업들을 위한 특단의 정책금융 확보와 운용이 시급한 실정으로, 상기 창업기업의 성장단계별 자금수요를 대비한 금융조성과 운용 및 적용이 필요

▣ 벤처캐피탈의 한계

- 대부분의 창투사들이 운용하는 벤처캐피탈은 창업초기의 벤처스타터나 영세기업 혹은 청년층이 이용하기엔 강한 기술력이나 기술담보력 등을 요구하는 등 매우 힘든 조건을 가짐
- 정부나 공공에서 일정 모태펀드를 투자한 창투사와 정부투자가 없는 창투사간의 벤처캐피탈의 운용과 이용도

3) 금융위원회에서 4대 정책서민금융을 조성하여 운용 중임. 미소론, 새희망론, 햇살론, 바퀴드림론 등. 2015년에 총액 4.5조원으로 2010년 이후 매년 약 28% 증액하는 추세임. 2015년의 부실률은 미소 7.1%, 새희망 2.5%, 햇살 12.3%, 바퀴드림 25.9% 정도임.

다른 조건을 가짐

- 기술이전과 거래 등 기술시장이 미흡한 우리나라의 경우 창투사들의 벤처머니 운용능력은 기술이전 시장이 활발한 선진국에 비해 후진적임
- 따라서 벤처캐피탈 형식의 지역정책금융 조성과 운용방식도 한계가 큼

3 경상남도 지역정책금융 조성방안

▣ 지역정책금융 조성의 전제와 종류

- 지역정책금융 수혜대상자를 구분하여 조성하고 운용해야 함
 - 첫째(서민), 영세서민, 귀농귀촌이나 푸드트럭과 같은 규모가 작은 경우 현재 운용하는 신용보증기금, 햇살론, 보금자리론 등의 운용규모를 대폭 늘리고, 홍보와 금융접근성을 높이며, 등 운용전략을 제고하는 등 활용성을 개선해 나갈 경우 어느 정도 해소 여지가 있음
 - 둘째(기업, 신산업), 수주에 의한 선박건조 RG발급과 금융지원, 또는 신산업 육성과 같은 경우처럼 정책금융의 수요규모와 액수가 상당히 큰 경우, 4차산업혁명 연계 smart factory 전환 조성을 위한 거대 자금 수요시
 - 셋째(벤처스타터, 신기술), 벤처스타터나 신기술금융의 경우 운용자금의 크기가 어느 정도 커야 하지만 상대적으로 운용에 대한 리스크도 동시에 큰 경우
- 이러한 세 가지 영역을 고려한 지역정책금융을 구분하여 조성하고 운용할 필요가 있음
- 운용 주체와 방식도 세 가지 각각에 대해 차등화가 필요함

▣ (서민금융)경남도 신용보증기금 확대, 햇살론, 보금자리론 등 홍보

- 우선 운용총액을 현재 대비 높여야 하고 접근성 개선을 위한 홍보 강화
- 지역과 대상을 넓혀 도내 전지역, 전업종 및 전도민을 대상으로 확대해야 함
- 상환 조건인 대출, 융자, 출자, 보증과 같은 형태에서도 기본조건을 완화하여 접근성 높여야 함
- 영세서민의 경우 일정액 미만으로 1회 정도는 대손충당으로 경남도, 운용사나 운용기관이 부담하도록 하는 전략⁴⁾
- 경남페이, 또한 블록체인에 의한 경남상품권, 재래시장상품권, 사회적기업제품 거래방식 등의 개선을 동시에 활용하여 서민금융과 함께 운용하여 효과 제고 필요

▣ (기업·신산업금융)지역산업진흥을 위한 지역정책금융 조성 and 운용

- 기업 및 신산업을 위한 지역정책금융은 곧 지역산업자본과 같은 역할과 성격을 가짐
 - 초기 1년 이내에 1,200억원, 3년에 3,000억원 조성 and 운용
 - 도내 기업의 수출입 촉진과 같은 분야에 기업자금 운용이 가능하나 국제규범(WTO)에 위배될 소지도 있으므로 운용에 유의해야 함
- 초기 지역정책금융 조성
 - 목표 : 1,200억원

4) 미국의 CDFI, Microloan, 유럽의 JASMINE, PSCI 정책금융이나 미국의 그라민뱅크USA나 방글라데시의 그라민뱅크도 회수가 힘든 부실, 즉 대손충당을 운용사가 안는 경우가 많음.

- 기간 : 1년 이내
 - 지역금융기관, 시중은행 경남지점, 지역기업 등
 - 도금고지기인 BNK경남은행(300억)와 농협(300억), 도내 4대 시중은행 지점(200억, 국민, 신한, 우리, 하나) 각 50억, 국책은행 도내 지점 200억(수출입, 산업은행 각 100억), 도내 10대 향토기업 200억(기업당 각 20억)
 - 조성을 위한 방법 : 대상 금융기관과 향토기업 및 경남도, 상의, 경총 등이 업무협약(MOU)에 의한 조성과 운용. 금융기관별 출자금액은 해당 금융기관에서 자체 운용하되, 운영방법은 정책금융운영 기준에 준함
 - 운용 방법 : 서민금융과 유사하나 과다한 담보력, 긴급한 RG발급을 요하는 경우에 적용
 - 중기 지역정책금융 조성
 - 목표 : 3,000억원
 - 기간 : 3년 이내
 - 초기 지역정책금융 출자(1,200억) + 추가로 도내 주요 대기업 영업이익에 준하는 출자(1,800억)
 - 조성방법 : 도내 주요 10대 대기업이 영업이익에 준하는 금액을 3년에 걸쳐 1기업당 연간 60억씩 총 1,800억원 조성. 금융기관별 출자금액은 해당 금융기관에서 자체 운용하되, 운영방법은 정책금융운영 기준에 준함. 또한 대기업에서 영업이익에 준하는 출자의 경우 해당 대기업의 협력 중소기업이 가급적 운용하도록 운용규칙을 정함
 - 운용 방법 : 긴급한 RG발급, 신산업 진입장벽인 자금애로를 해소할 수 있는 지역산업자본 혹은 향토산업자본과 같은 역할을 하도록 운용방법을 고려. 4차산업혁명 기술 관련한 정책자금 운용에 있어서도 특정 대기업과 연관된 협력적 중소중견기업에서 자금운용시 대기업과 공동투자형태로 운용방법 모색
- ※예, A대기업 협력사인 B중소기업의 스마트팩토리사업 추진에 총 소요자금 10억 소요. 정부지원 5천만원, B기업 자기자본 투자 2억원일 때 나머지 7.5억원은 지역정책자금 이용. 이 때 출자한 A대기업 자금을 우선 활용하되, A기업에서는 이를 협력사 B기업에 간접 투자형태로 정책자금 운용방식을 정한다면 기업간 윈-윈 가능

▣ (벤처스타터·신기술금융)도내 벤처창업투자 및 기술을 위한 정책금융 조성과 운용

- 경남에서는 파괴력 있는 벤처기술 개발이 잘 이루어지지 않음. 또한 기술이전시장 미흡으로 대형벤처기술 이전도 잘 되지 못함
 - 따라서 중기청 등에서 제공하는 모태펀드(정부가 일정 출자하는)를 적극 활용한 벤처자금 조성 후 운용 필요
- 경남은 과거에도 유사한 형태의 펀드를 조성하여 운용하였으나 성과나 성공보다는 운용결과의 미흡으로 청산된 사례가 몇몇 있음
- 벤처투자자를 수도권 등 전문투자자보다는 지역실정을 잘 아는 지역금융인과 지역산업인들로 구성된 벤처투자자 구성과 운용 필요
- 청년창업투자펀드 조성
 - 규모 목표 : 500억원
 - 조성 기간 : 1년 이내
 - 펀딩 방법 예시 : 모태펀드(중기청 등 200억), 지역금융기관(200억), 경남도, 기업 등 100억
 - 운용 방법 : 모태펀드 200억과 경남도 등 공공기관 출자금은 벤처투자의 특성상 최대한 환수를 해야 하나 회수가 불가능해도 대손충당으로 처리되도록 운용(정부(중기청) 모태펀드 운용상에 기 허용한 사례가 있음)

벤처기술개발과 사업화로 성공시 해당 벤처기업이 성공분담금으로 몇 배를 펀딩 후 재이용하는 구조로 운용 방법을 개선

- 운용의 장기성 : 그리하여 펀드의 생명이 일정한 운용기간이 지나도 생명력을 갖고 지속할 수 있는 구조로 운용방안 개선

4 경상남도 지역정책금융 운용방안

▣ 지역정책금융에 대한 이해

- 도에서 조성하려는 지역정책금융은 근본적으로 금융시장 질서 왜곡과 무관함
- 조성을 위한 출자나 원금은 출자자의 몫으로 그대로 귀속과 환원 가능하며, 금리는 서민금융 부문을 제외한 기업·신산업금융과 벤처스타터·신기술금융의 경우 시중금리와 거의 같은 수준에서 운용
 - 다만, 자금 접근성 완화와 벤처투자나 대기업 협력사인 중소기업의 정책자금 이용시 해당 대기업에서 협력 중소기업에게 투자하는 형식으로 자금운용 방식을 활용할 필요가 있음

▣ 지역정책금융에 대한 홍보 철저

- 모든 금융의 홍보 철저로 접근성을 최대한 넓혀 도민이면 누구든, 언제 어디서든 상시로 이용이 가능해야 함
- 서민금융은 복지전달과 체계선상에서 운용 필요. 즉 주민센터, 복지, 일자리센터 등에서도 금융접근성 정보 개방과 기회 증대
- 기업·신산업금융과 벤처스타터·신기술금융은 도내 상공회의소, 여성경제인회, 벤처기업인회 등 각종 기업 협회, 경총 등에 지역정책자금 모집과 결성단계에서부터 홍보
 - 운용 시에도 기업군들이 상시 이용 가능하도록 홍보 강화

▣ 자금순환 강화, 단계별 출자증액 및 관리운용 철저

- 서민, 창업기업, 기술기업, 신산업기업들 모두 자금사정이 힘들어 정책금융을 활용하므로 초기 조성자금의 회전이 더딜 수 있음
- 운용방식을 최대한 유동화하여 자금순환이 잘 되도록 해야 함
- 순환이 늦어지면 2단계 출자를 단행하여 정책금융 파이를 높여 나가되, 총액이 과다할 경우 기존 금융시장 질서 교란을 야기할 수 있기 때문에 총액한도를 현재의 두 배를 넘지 않도록 함
- 대부분의 정책금융 운영상에는 조달, 판매관리, 마진 및 부실 등에 비용 발생함. 조달과 판매관리는 도와 도내 금융기관 및 상공계가 공동으로 추진하여 비용 최소화하고, 각 금융별로 부실에 대한 대안을 마련하고 운용 주체의 대손충당이나 부실용인(不實容認) 상한선 등을 설정하여 운용 필요

▣ 정부와 금융위 등 연계한 정책자금 조성 및 운용

- 서민금융이건 창업과 기술금융이건 정부와 금융당국과 긴밀한 협력과 이해를 바탕으로 조성 및 운용 바람직
- 자금사정이 열악한 한계기업 회생의 정책자금 운용은 해당업체나 업계 발전이나 금융산업 발전을 훼손할 수 있으므로 유의 필요

[참고] 정책금융 활용한 스마트공장화(Smart Factory) 방안

☞ 도내 제조업체 Smart Factory 추진 현황

- 도내 기계산업군은 4차산업혁명에 매우 취약함
- 4차산업혁명에 순응하기 위한 1단계가 Smart Factory화임
- 경남TP 주관, 2016년부터 추진되고 있으며 현재 1기업당 5천만원의 정부지원금(보조)이 주어지나 적용기업 수나 금액 모두 매우 열악한 실정
- 기업규모나 업종별로 다르겠지만 기계업종 중소기업 1기업 대상 Smart Factory 비용은 대략 10억 정도 소요, 정부의 5천만원은 마중물 대신 해야만 하는 기업주에게는 빨리 하라는 경고음 정도로 들리는 실정임

☞ Smart Factory 추진을 위한 정책금융 활용방안

- 정책금융으로 제시한 세 가지 중 ‘기업·신산업금융’ 활용 필요. 이는 지역산업자본 내지 향토기업자본과 같음
- 도내 중소기업의 스마트공장 조성과 4차산업혁명 기술의 개발, 이전, 사업화 및 융복합화에 이 정책자금 운용 필요. 대기업과 중견기업은 선박업종의 RG발급과 관련된 일부를 제외하여 예외로 하고 중소기업이 주 대상임
- 스마트공장 대상 중소기업으로 ①독자기술과 상품생산기업, ②대기업 협력형기업, 그리고 ③생산품 중 절반씩 협력과 독자제품생산기업으로 구분됨
- 첫째, 독자적 기술과 상품생산기업은 10억 정도의 비용부담으로 스마트공장화에 애로가 큼. 이 경우 지역정책 금융을 적극 활용할 필요가 있음
- 둘째, 대기업 협력형 중소기업이 스마트공장화할 경우, 우선 정책금융 활용시 해당 대기업 출자금을 우선 활용 하고, 대기업에서는 투자의 형태로 간주되도록 정책자금 운용방안을 설정
 - 앞에서 예를 든 것처럼, A대기업 협력사인 B중소기업의 스마트팩토리사업 추진에 총 소요자금 10억 소요. 정부 지원 5천만원, B기업 자기자본 투자 2억원일 때 나머지 7.5억원은 지역정책자금 이용. 이 때 출자한 A대기업 자금을 우선 활용하고, A기업에서 협력사 B기업에 간접 투자형태로 운용
 - 대기업 협력형 중소기업이 스마트공장화하는데 10억이 소요되는데 해당 대기업이 정책금융을 출자하지 않았다면, 먼저 경남도-대기업-중소기업간 협약을 체결하고(청년채용을 위한 ‘기업트랙’ 형태), 다음으로 도에서는 정부지원 5천만원, 정책금융지원 2억원, 해당중소기업 2억원 부담 및 대기업 5.5억원의 투자 형태로 지원하여 중소기업의 스마트공장화를 추진
 - 이 형태를 “경남형 대중소기업협력형 스마트공장화 정책”으로 명명하여 추진 필요
- 셋째, 생산품 중 절반은 대기업 협력, 나머지 절반 정도는 해당기업 독자제품생산의 중소기업
 - 이 경우 해당 중소기업, 정책금융 및 대기업 등 세 영역에서 약 33% 정도를 부담하여 스마트공장화 추진함
 - 이 경우도 도가 주도하여 협약을 체결
- 협약체결에 도가 주도해야 하는 이유와 효과 : 대기업과 협력기업간 신뢰 증진, 대기업의 사회적 책임(CSR) 고취, 도내 중소기업 스마트공장화 앞당기는 효과 및 도내 기업과 제품의 미래경쟁력 강화 등이 있음

